

主題

# 2000년도 정보통신 환경변화와 발전방향 -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정보통신 정책 -

정보통신부 유 필 계

차 례

- I. 서 론
- II.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
- III. 맺음말

## I. 서 론

현재 우리 사회는 인터넷등 정보기반을 통한 정보의 원활한 창출, 유통, 활용이 부가가치 창출과 생활의 핵심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빛의 속도」로 교환되는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이 개인, 기업이나 국가의 힘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사회로 향하고 있다.

세계 인터넷인구는 '99년말 현재 2억명에서 2005년에는 7억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99년말 1천만명에서 2001년에는 3천만명으로 2년만에 3배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인터넷은 국민이 삶을 꾸려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일반전화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맞게 법제도를 정비하며, 정부와 기업의 정보화추진에 가일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둘째, 지식정보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하며,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셋째, 정보통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콘텐츠산업과 S/W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며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통신 벤처기업을 활성화 할 것이다.

넷째,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IMT-2000 사업자를 선

정하며, 통신사업 분류 및 역무구분체계를 재정립 할계획이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신비밀보호를 강화 할 것이다.

다섯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파자원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우주통신개발을 추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며 대화형 디지털 방송시대를 조기에 구현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섯째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을 적극지원하고, 해외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 II.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

전자거래,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 지식정보사회에서 일상화 될 초고속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기에 구축한다. 당초 2010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겨 구축하며, 전국 144개 주요지역을 155Mbps ~ 2.5Gbps급의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기간전송망의 구축 역시 2년 앞당겨 금년중 완료 할 예정이다. 2005년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완성되면 전국 1,600만 가구의 95%인 1,500만 가구가 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금년중에는 전화국에서 이용자까지의 가입자망은 ADSL, CATV 등을 활용하여 중소도시까지는 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200만 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수용할 것이다. 도서·벽지 등 원격지역에 대하여는 위성인터넷 등 무선망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간 인터넷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도록 할 것이다.

급속한 인터넷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인터넷 서비

스 품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하여 고속네트워킹, 3차원 원격의료 등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를 보급 할 계획이다.

정보화의 촉진에 장애가 되는 법령과 제도를 지식정보사회에 알맞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그 동안 주로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체제 마련과 기반조성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에 주력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104개의 법령을 제·개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우선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국회법,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등 22개 법령을 제·개정한다.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정보기술(IT)을 집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부정책, 민원처리과정 등 행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하여 지식기반 행정을 실현하기위해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일괄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화를 확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인프라로 복지정보연계시스템(Welfare-Net)을 구축하는 등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산사업, 호적민원 온라인 처리사업 등 40개 부처 및 청에서 추진하는 172개 정보화사업에 총 6,7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정보화를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조달업무 전자화의 대상 부서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26개 공기업의 정보

화를 촉진(B to G)하며, 건설, 국방 등 공공부문의 전자거래(CALS)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지식경영시스템(ERP)을 중소기업에 시범적으로 구축(B to B)하며 또한, 농산물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인터넷 쇼핑물(B to C)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 1.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 기반조성

일반국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과 정보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주부,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확대한다. 학교 전산망 사업, 교육용 PC 보급 등 학교정보화 교육기반을 급년 내에 완결하고, 학교별로 1명씩의 정보화 선도교사를 선발하여 학교정보화의 기수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769개 컴퓨터학원에 '주부인터넷교실'을 개설하여 가계활동의 중심이 되는 전업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이 성황리에 실시되고 있고 20개 군부대에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하여 군 복무기간중 누구나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전국 각지에 소재한 3,600여개 우체국은 정보생활화, 국민정보화 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보교육의 장」으로, 또한 산간벽지 우체국은 다른 어떠한 사업기관보다도 정보격차 해소의 전초기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컴퓨터 교육공간과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제공하는 정보교육센터를 중소도시의 우체국 25개소에 설치하며, 도서벽지등 정보화 소외지역의 주민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위성인터넷플라자 1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99.7월에 발간된 미국 정부의 "Digital Divide

보고서"는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심화되는 정보격차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지식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여 계층간 정보격차를 시정토록 할 것이다. 장애인과 여성의 기초적인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관련단체,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을 지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청소년가장 등에 대한 S/W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전국 12개 소년원에 정보화 교육장을 구축하여 보호소년(약 2,500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PC의 규격개선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PC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정보통신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웹브라우저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무료 또는 저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침입, 불건전정보 확산, 개인정보 오·남용 등 역기능 방지대책을 추진하며, 정보보호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산·학·연 공동으로 암호 알고리즘, 전자서명 국제상호인증 등 핵심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바이러스·해킹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민간 백신업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 암호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가칭)암호이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며, 사이버 테러 등으로부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가칭)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누구나 안심

하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학부모 정보감시단 등 시민단체의 범국민적 운동을 지원하는 등 국민 스스로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 2. 정보통신에 기반을 둔 신산업 육성

인터넷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인터넷 광고, 인터넷 방송 등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도입, 전자자금이체법 제정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인터넷산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제작, 웹마스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3차원 가상현실기술 등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범세계적인 인터넷 확산과 IMT-2000, 위성방송 등에 활용될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90여만건의 영상자료로 디지털뱅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며, 데이터베이스(DB) 보호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투자위주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의 영문화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우수한 국내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S/W 산업의 창업인프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다. 전국 24개 지역에 소프트웨어타운을 조성하고, 서울 소프트웨어타운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하며, 교포 2세, 유학생 등의 현지창업을 지원하고, 국내 유망벤처기업을 이들과 연계하는 한민족 S/W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선진국 유학인력의 병역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리눅스(Linux) 관련 프로그램, 컴포넌트 S/W 등 신기술 분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방송, 무선통신 등 6대 중점분야에 7,036억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한다. 핵심부품기술은 산업체가 주도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현재 40% 수준의 부품국산화율을 2004년까지 80%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인터넷과 가전제품의 결합추세에 대응하여 인터넷 정보가전(Internet Appliance)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고용모델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자격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웹 디자인, 정보검색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어 민간주도의 기술교육과정 신설을 지원하고, 정보통신 기술자격체계를 개선·정비하며, 대학에 인터넷 등 관련학과와 전공의 신설을 지원하고, 정원의 증원 및 탄력적인 운용방안을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보통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장감 있는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우수한 정보통신

분야 연구센터(ITRC)를 집중 육성한다. 정보통신을 선도하는 선진국의 우수대학에서 ASIC설계 등의 첨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 장학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기존 산업인력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전환교육과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 등 잠재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할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방침으로서 인터넷 등 10여개 전략분야별로 100여개의 중소·벤처기업군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1,500억원 이상 규모의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전문벤처캐피탈을 3개 설립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충실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주문형반도체(ASIC) 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서울 강남지역에 ASIC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ASIC타운 조성을 유도할 것이다.

### 3. 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용자편의 증진

IMT-2000 서비스는 2GHz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현재 이동전화 및 PCS에 비해 데이터전송속도가 가속화되고, 서비스가 고도화된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로서, 선진각국들은 2000년대초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2002년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기술개발 추세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자 수, 주파수 할당 등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6월중 수립하고,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가 융합되고, 데이터망을 이용한 음성서비스(VoIP)등 고도통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통신사업 분류 및 역무구분제도는 이러한 기술발전 및 수요변화에 대처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통신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분류 및 역무구분체계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이나 접속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정확한 원가산정이 필수적이거나 현재 사용중인 회계자료에 의한 원가산정방식은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효율적인 망구축을 전제로 장기간에 걸쳐 생산을 증가시켰을 때 추가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장기증분방식(Long-Run Incremental Cost)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환경에 맞는 장기증분비용방식 및 이에 근거한 통신망 원가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2000년 중 가입자망, 교환망을 포함한 유선통신망의 구성형태 및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유선통신망 표준원가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시장의 경쟁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인가·신고제로 이원화된 요금규제 제도를 사업자들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격상한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격상한제의 도입을 위하여 대상 서비스, 시행시기, 가격상한 등 요금산정방식 및 효율적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99년에 사업자간 신규가입자 유치위주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품질에 의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품질평가제를 최초로 실시한 바 있다. 금년에는 도심지 이면도로, 건물내 등에서 통화품질을 측정하여 이용자가 실제 체감하는 통화품질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측정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결과가 사업자의 투자계획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 평가는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주관적 평가는 연1회(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사업자 및 서비스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쟁이 도입되고 일상 생활에 널리 사용되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시내 및 시외전화, 이동전화, PC통신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요금, 품질, 이용자 피해사례 및 처리소요시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자 한다.

통신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99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금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현황 보고방법 및 절차,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재전자 범위등을 구체화할 것이다.

현재 시외전화 지역번호권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며, 번호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 금년 7월부터는 국민들이 시외전화 불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권이 16개로 대폭 축소된다. 그리고,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전화번호 전체자리수를 10자리로 통일하여 통화접속 지연시간을 1~2초 정도 단축함으로써 통화품질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도입될 신규 통신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번호자원을 비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 4.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

극초단파 대역의 재사용율이 초극초단파의 500배 이상인 것과 같이 주파수대역 및 용도에 따라 실제 활용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파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하여 재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전파법령에 반영하여 제도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파수 할당 이후의 기술 및 시장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실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회수절차, 손실보상, 가입자보호대책등도 마련하고자 한다.

서비스의 멀티미디어화가 진전되면서 역무구분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으며, 사업권의 양도나 양수, 전략적 제휴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사안별 사후 승인위주의 현행 독과점 규제제도로는 전파의 회소성,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무선통신서비스의 기반인 주파수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주파수 총량제한을 적용할 동일인 및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하고, 동일 또는 다른 서비스 간 적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의 수준의 결정하며, 주파수 총량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냉진시대에 확보한 기술과 위성인터넷등 신규수요의 창출로 위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총 위성수는 약 1,020기이나 3,000기 이상의 위성이 계획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11기의 위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여 순수 국내 통신방송 위성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처, 국방부, 산업자원부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위성개

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0년 4.5억대의 거대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TV산업을 육성하고, 시청자에게 디지털TV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디지털TV 시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방송을 통하여 기술적 사항을 점검하고 운용인력을 양성하는 등 내년으로 계획된 본 방송에 착실히 대비할 것이다.

### 5. 수출촉진 및 해외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산업은 60~70년대 경공업, 80~90년대 중공업에서 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99년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은 399억불로 30.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45억불의 흑자로 17%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수출 1,442억불의 28%에 해당하는 것이며, 흑자는 전체 245억불의 59%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데스크탑, 액정모니터, 디지털TV 등 수출유망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금년에 정보통신분야에서 450억불 수출과 140억불 무역흑자를 달성이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설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재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WTO, OECD, APEC등 국제기구에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 무관세화, 소비자보호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WTO에서는 1998년 '전자상거래 각료선언' 채택이후 전자적 배달물의 분류, 관세부과, 관할권등 무역관련 이슈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OECD에서는

'98년 오타와 각료회의, '99년 파리포럼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보호, 조세부과문제, 선후진국간 격차해소등 전자상거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APEC에서는 '98년 '전자상거래 실행조치를 위한 청사진'을 채택한 이후 전자상거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상거래 규모증정, 지표개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기구별, 전자상거래 이슈별 연구활동 및 관계 부처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국제적 전자상거래 규범설정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선진국과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 Ⅲ. 맺음말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는 이제 금융, 노동, 공공, 기업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의 성과를 정보화로 뒷받침하여 마무리 짓고, 인터넷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높은 교육열, 창조적 문화전통, 활발한 벤처창업,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적합한 주기환경등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간다면, 인터넷 시대는 우리에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할 수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정보화 선두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 필 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학사)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경영학과(MBA)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행정고시 22회  
체신부 공보담당관  
정보통신부 기술기획과장  
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  
정보통신부 Y2K상황실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파견(현재)